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도당 “당비 지출내역 공개” 선언 반부패 ‘김영란법’ 파장 속 파격 행보

황주홍 위원장, 도당 운영 포부 및 비전 밝혀

“투명하고 깨끗한 재정 운영으로 진정한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제2의 창당을 하는 각오로 재정 운영의 혁신과 당원중심의 도당 운영 비전을 밝히며 새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1월 18일 경선을 통해 당선된 황주홍 새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5일 “앞으로 도당의 중심은 위원장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당과 당원의 관계가 중앙당>도당>지역위원회>당원의 순이었다면 앞으로는 당원>지역위원회>도당>중앙당의 순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을 위해 전액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도당의 재정을 매월 당보를 통해 1원 한 장까지 투명하게 지출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매월 당비 지출내역과 주요 당무를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사실상 당원들이 결재하는 한국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혁명적인 정당 개혁조치이다.

전남도당의 당비 내역 공개는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일부 정치자금 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당과 중앙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어 전남도당의 당비 운영 개혁조치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당은 영남권 등의 취약지역 시·도당과 달리 중앙당으로부터 정당 국고보조금 없이 순수한 당비 수입으로만 각종 선거관리 및 당원관리 등의 도당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

3월 현재 전남도당에는 35만1천여명의 당원이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수는 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역 당원들이 내는 직책당비와 약정 당비, 특별 당비는 월 평균 4천만~6천만원에 이른다.

황 위원장은 “중앙당으로부터의 시도당으로의 분권, 지역위원회로의 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투명한 재정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중앙당이 받는 정당보조금도 전남의 위상에 맞게 당당하게 배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당원들은 지금까지 중앙당에 당비를 바쳤고, 목표를 바쳤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중앙당으로부터 당의 ‘뿌리’이자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었지만 그 호칭에 걸맞는 예우와 배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보조금 배분과 중앙당 연수원 전남 유치 등의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당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남도당 당보
2015. 3. 12

발행인 | 황주홍
편집인 | 홍지영
편집위원 | 변중섭·김상인·김인아·송승환·장은영
발행처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춘분을 2주 앞둔 지난 8일 새벽 목포시 동명동 장터시장, 새벽 장터 상인들이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손님이 많이 올 거여”라며 상가 할머니께서 희망기를 부르신다. 마수걸이에 신이 난 할머니가 웃으며 말한다. “오늘도, 올해도 힘차게 살자고!” 사진 | 윤광제

●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전남발전 공약 점검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지역 균형발전, 탕평인사 공약 '외면'

“새누리당 집권 7년, 위기 아닌 게 없다. 민주주의는 근간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지 오래이다. 한반도 정세도 여전히 위태롭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폭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평가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집권 2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출범한 지만 2년을 맞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과연 얼마나 실천됐을까?

박근혜 정부의 전남 예산확대와 인사소외는 확대를 넘어 노골적인 차별 수준이다.

지역균형 발전 부문

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송정~목포)과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사업 등 7개 분야 11개 사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8천580억원을 요청했으나 그 중 997억원만 반영(11.6%)됐다. 사업별로는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과 남해안철도에 각각 1천500억원씩의 반영을 요청했으나 600억원과 52억원만을 반영받는데 그쳤다.

특히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의 경우 새누리당 집권 7년간 부산~진주 등 영남권 구간만 사업을 진행하고 전남 구간은 착공만 해놓고 경제성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미뤄왔다. 올해 요청한 1천500억원 실시계획비 52억원이 겨우 반영됐다. 그나마 예결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의 노력으로 반영됐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5천억원을 요청했으나 100억원만 반영됐다. 사업 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년간 전혀 예산지원이 없는 공약사업도 3건에 이른다. 전남~경남간 한려대교(100억원),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 인프라 구축(60억원), 여수박람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해양복합센터 건립(25억원) 공약은 아예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예산 4천213억원의 반영을 요청했으나 실제 반영액은 163억원(9.07%)에 그쳤다.

● 대통령 주요 공약사업 추진현황

대선 공약 사업명	총 사업비	2015국비신청액	반영액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건설	2조4731억	1500억	600억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	1조3083억	1500억	52억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조7990억	5000억	100억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5040억	100억	0원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	634억	120억	110억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1660억	90억	25억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	3714억	270억	110억
총계		8580억	997억(11.6%)

인사 부문

탕평인사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철저히 전남을 비롯한 호남출신의 발탁을 외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실태조사단’(단장 민병두)이 2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현재 18명의 국무위원 중 호남출신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함평 출신)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남은 6명, 충청은 4명, 제주 출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명도 없었다.

또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국가 의전서열 33위까지에 해당하는 34명(국회부의장 2명 포함) 가운데 무려 15명(44.1%)이 영남 출신이었다. 이어 수도권이 9명(26.5%), 충청 5명(14.7%), 호남 4명(11.8%), 강원 1명(2.9%) 순이었다.

더구나 5대 권력기관인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장은 영남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 이들 5개 기관의 고위직(검찰 검사장급, 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 163명 가운데에서도 영남 출신은 71명(42.3%), 수도권은 32명(19%), 호남은 30명(17.9%) 순으로 영남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어 충청 출신은 28명(16.7%), 강원 5명(3%), 제주 2명(1.2%) 순이었다.

10명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자리에는 아예 단 1명의 호남출신도 없다. 또 3급 이상의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단 968명 중 338명(34.9%)이 영남 출신이었다.

검찰의 핵심 사정라인과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우 대구경북, 이른바 TK 출신이 장악했다. 지난달 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돼 현 정부 들어 TK출신만 세 명이 번갈아 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TK인 전임 김수남 검사장은 ‘정윤희 문건 부실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사정라인인 민정특보와 민정수석도 역시 TK 출신의 이명재-우병우 라인이 기용됐다. 현 김진태 총장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고검장급도 9명 중 5명이 TK를 포함한 영남출신이다. 이쯤 되면 노골적인 ‘편애인사’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 동안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았다. 이 정부에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꿈은 접어야 할 듯 싶다. 홍지영 | 편집인

■ 국가 의전서열 1~33위 출신지역

순위	직위	한직	출신
1위	대통령	박근혜	대구
2위	국회의장	정의화	경남
3위	대법원장	양승태	부산
4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부산
5위	국무총리	이완구	충남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충남
7위	여당 대표	김무성	부산
8위	야당 대표	문재인	경남
9위	국회부의장	정갑윤	울산
9위	국회부의장	이석현	전북
10위	감사원장	황찬현	경남
11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서울
1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북
1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인천
14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강원
15위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	대구
16위	야당 원내대표	우윤근	전남
17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서울
18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북
19위	외교부장관	윤병세	서울
20위	통일부장관	홍영표(재)	서울
21위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
22위	국방부장관	한민구	충북
23위	행정자치부장관	정중섭	경북
24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충북
25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경북
26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경북
27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서울
28위	환경부장관	윤성규	충북
29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남
30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부산
31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재)	서울
32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재)	부산
33위	국민안전처장	박인용	경기

전라남도당의 새로운 마음가짐

“국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과거 (X)
중앙당 (당직자) > 전라남도당 (당직자) > 지역위원회 > 당원

이제부터 (O)
당원 > 지역위원회 > 전라남도당 (당직자) > 중앙당 (당직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

국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현수막이 도당 사무실에 걸려 있다.

“함께 하는 전남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사무처 당직자들은 9일 무안 남악 신도시 도당 당사 사무실에서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과 ‘투명하고 깨끗한 재정운영’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당직자들은 “진정한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겠다는 신임 황주홍 위원장의 도당 운영 비전을 저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혁신과 당원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업무자세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당 성명서

사상 최악 특정지역 편중인사 대한민국 인재는 영남 뿐인가!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 출신의 편중인사’와 ‘호남 출신의 소외인사’로 요약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 실태 조사단’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박근혜 정부 국가의전서열 1~10위까지 11명(국회부의장 2명)가운데 8명이 영남이며 충청권 출신은 2명, 호남권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영남 일색이다. 또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도 영남권이 100명(42.7%), 그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51명(21.8%)으로 지역편중이 뚜렷하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도 수석과 신임특보 7명 가운데 4명, 핵심 경제라인 6명도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다.

영남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 이라고 선언하며 대 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었는데, 작금의 530만 광주, 전남·북 시민들의 허탈감이 분노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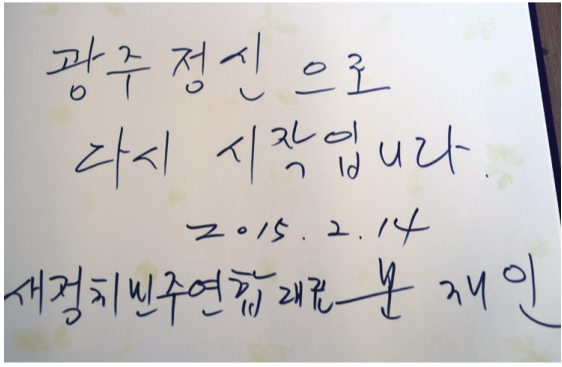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지역균형 인사에 나름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지역 안배는 물론이거니와 대 탕평을 위한 인사 철학이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와 독점인사를 중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3. 5.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문재인 당대표, 5·18 묘지 참배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박혜자 광주시장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문재인 대표의 5·18 묘지 방명록 서명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구성키로

당규 상 공식기구화, 최고위원회-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도 추진

황주홍 위원장 등 문 대표와 3일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발족된다. 또 협의회 발족과 함께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간의 연석회의도 정례적으로 추진된다.

5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장흥·영암·강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최고위원회-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 후 추진키로 했다.

시·도당 위원장들은 또 △시·도당 협의회를 당규 상 공식기구로 해 줄 것 △국고보조금의 시·도당 배분 △사무처장을 포함한 시·도당의 당직인선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줄 것 등을 문 대표에게 건의했다.

“전남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산업”



이낙연 전남지사 화순 백신평구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는 5일 “전남의 미래 먹거리 방향은 바이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전남 화순 백신평구에서 가진 현장 방문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GS 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케미컬과 연계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생물의약품연구원을 방문한 이 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도 반드시 화순 생물의약품산업단지로 유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녹십자 화순공장에서도 이어진 요청에 허은철 녹십자 사장은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순 백신평구는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생물의약품연구원, KTR 헬스케어연구소, 녹십자 화순공장, 생물의약품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10년 11월 특구로 지정됐다.



전남-경북도의회 동서화합·상생발전 노력

전남 의장단,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경북 의장단, 3월 김대중기념관 방문 예정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와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지난 2월 24일 동서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도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합의문 채택은 지난해 11월 동서화합포럼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과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이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양 도의회는 국민통합 정치를 선도하고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공동합의를 계기로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단이 연 1회 상호 방문하며 주요 행사에 의장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도의회 신청서 개청식에 전남도의회 의원을 초청하기로 했다. 양 도의회 의장단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참배했다.

초대시조 (時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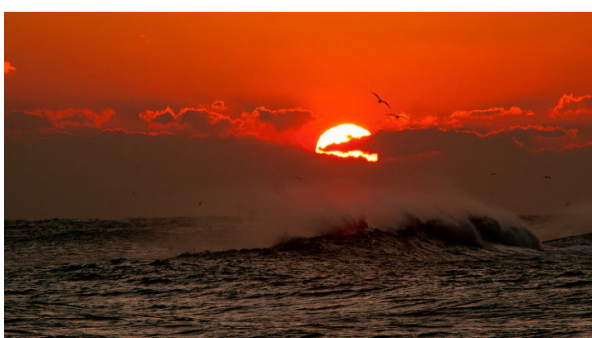
이진형
시조시인·前 글로벌인재학교 교감

아침

한 겹씩 쌓여가는 상처(傷處)를 매만지며
간밤에 지쳐버린 달과 별 잠재우며
벗고동 나래를 치듯 힘차게 눈을 뜬다.

저 바다 수심(水深) 깊이 생명(生命)을 심어온
해녀(海女)의 젓가슴이 온 바다 일깨우듯
역만년 침묵(沈黙)을 깨고 불기둥이 치솟는다.

한(恨) 서린 네 눈빛이 저리도 야멸찬데
오늘도 생채기는 파도를 일깨우고
저만치 굶은 장막속 일어서는 아침이여!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처 상근자 당직개편 실시

“국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김현호 수석 사무처장 겸 총무국장 (전 영암군청 비서실장) 박근용 사무처장 (전 중앙당 지방자치국 부국장) 홍지영 대변인 (전 광남일보 정치부장) 이남규 조직국장 (2006년 장성JC 회장) 김호진 기획국장 (전 나주지역위 총무부장) 박민건 민원국장 (전 홍보국장) 전진우 전략국장 (전 조직국장)

수석 사무처장 겸 총무국장 김현호, 사무처장 박근용, 대변인 홍지영, 조직 이남규, 기획 김호진, 민원 박민건, 전략 전진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달 15일 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 사무처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 전남도당 수석 사무처장 겸 총무국장에는 김현호 전 영암군청 비서실장이, 대변인 겸 홍보국장에는 언론인 출신의 홍지영 전 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이 임명됐다. 조직국장에는 이남규 전 도당 청년국장, 기획국장에는 김호진 전 나주·화순지역위 총무부장, 민원국장에 박민건 전 도당 홍보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전 조직국장 전진우씨는 전략국장으로 이동했

다. 김현호 수석 사무처장은 2월 15일 열린 2차 운영위원회 당직 인선 심의건 위임 결정에 따라 3월 6일자로 수석 사무처장을 겸하게 됐다. 다음은 사무처 당직 인사 명단.

● 상근직

△수석 사무처장 겸 총무국장 김현호 △사무처장 박근용 △대변인 홍지영 △조직국장 이남규 △민원국장 박민건 △기획국장 김호진 △전략국장 전진우(조직국장) △총무간사 장미랑(유임)

박지원 의원, 설 연휴동안 목포 구석구석 민생 탐방

진도 팽목항 찾아 세월호 유가족 위로

박지원 의원(목포·전원내대표)은 설 명절을 전후로 9일 동안 목포에 머물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의 이야기에 직접 귀를 기울이는 등 민생 탐방을 하였다.



박 의원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14일(토) 목포지역위 상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보내준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더욱 단합해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다.

15일 오후에는 하당알뜰시장, 이로·한일·동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방안 모색을 위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장흥군, 119생명번호 서비스 업무협약

장흥군(군수 김성)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도당 위원장, 119안전재단 임태희 이사장, (주)엠디엠 문주현 회장, 김기식 강진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119생명번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엠디엠은 119생명번호 팔치 1천개(2천만원 상당)를 장흥군에 후원하고, 119안전재단은 안전 취약계층에게 가입자 병력사항과 보호자 정보가 등재된 119생명번호를 발급하게 된다.

세월호 선체 즉시 인양 FTA 대책 수립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는 지난 2월 2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15년 제2차 임시회에서 ‘한-중, 한-뉴질랜드 등 FTA 대책’과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안’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임시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통해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새로워진 전남도당

“입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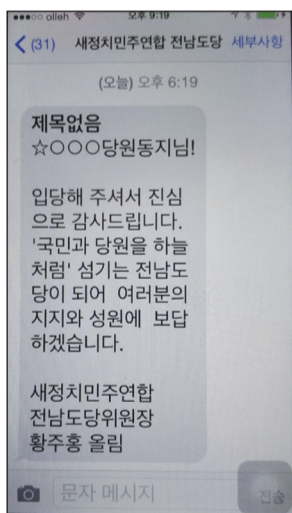
전남도당, 신규 입당자에 축하 문자 메시지 발송

“OOO 당원동지님! 입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전남도당이 되어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2월부터 모든 신규 입당자들에게 보내는 입당 축하 문자 메시지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당원이 중심인 도당 건설’을 목표로 내건 신임 황주홍 위원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당원에 대한 대접이 당비납부의 의무만을 진 ‘의무당원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진정한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당은 축하 메시지 외에 매월 당보를 통해 재정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급 선거과정의 공명정대한 관리,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당에는 3월 현재 35만1천여명의 당원이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보’ 제호 공모 설문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월간 ‘전남도당 당보’를 당원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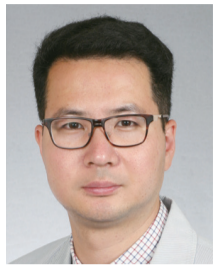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홈페이지(www.minjoo.kr) 설문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아래 번호 중 1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기간 : 2015. 3. 10 ~ 3. 24(15일간)
- 선택번호 : 1개 항목만 선택 체크

- 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보(현 사용) ②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원의 소리 ③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새소식 ④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뉴스 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신문 ⑥ 기타(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 남악시론

수권정당 창출의 비전과 혁신과제



송승환 편집위원

지난 대선(大選)은 52:48의 대접전이었다. 75.8%의 투표율은 10년 전인 2002년보다 더 높은 것이었으며, 변수가 될만한 제3당도, 제3후보도 없었다. 즉 양당 중심, 또는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 간의 총 동원전(動員戰)의 형태로 치러진 것이 지난 대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3김(金) 체제 이후의 주목할 만한 정치지형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대선결과로부터 읽어 내야 할 한국 정치지형의 기본구도가 있다면, 보수-진보 양대 진영을 축으로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동원이 대폭 늘어나고, 결집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보 대 보수'의 역학구도를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오랜 관성에 의한 사고(思考)일 뿐이다. 물론 기울어진 곳이 없지는 않다. 가령 여야 힘의 편차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기울어져 있다. 언론과 풀뿌리조직 같은 영역에서도 기울어져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패권(hegemony)구도는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몇 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와 사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민심(시대정신)

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공간 속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상황은 한 마디로 '보수패권의 사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멸해가는 패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패권(헤게모니)도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을 제대로 세우야 하는 상황이다. 정당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시대교체를 위한 작업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의 흐름과 정당 간 역학구도의 불일치(미스매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대정신의 흐름에 맞게 정당 간 역학구도를 개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정신의 수위를 낮추어 정당 간 역학구도에 맞추는 것이다. 당연히 합당한 방법은 전자(前者)라고 볼 수 있다. 정당 간 역학구도를 개조하는 일은 결국 진보진영, 특히 야권의 질서를 혁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 비전은 무엇인가? 다당제? 제3지대 정당? 아니다. 핵심 목표는 보수패권을 대체할 '새로운 수권정당'을 창출하는 것이다. 2016~2017년 정권교체를 전망해 볼 때 보수진영 및 여권의 가치, 의제, 조

직, 인물 등 정치적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음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 자체로 보수의 총체적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 및 야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증장기 계획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권정당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정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갖춘 주도그룹이 탄생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과 가치노선'으로 무장되고, '사회문제의 현장에 깊이 뿌리박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이 결합해서 본격적인 정치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정당혁신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개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어넘는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도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외부에 존재하는 각계 시민사회 인사와 학자, 전문가들의 가치를 수용해냄으로써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편집위원 좌담회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남도당 당보 편집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편집기획회의를 마치고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회 토론 내용을 요약,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선거 때만 당원 찾지 말고, 평소 의사결정 참여시켜야 국민경제 총체적 위기... '서민경제 회생'에 올인을 민생에서 비전·희망 제시, 도민·당원 신뢰 되찾아야

도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 각 분야별 로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비전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를 운영하기 전에 정당을 운영하는 것을 볼 텐데, 예측 가능하지도 않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 송승환 정당정치 위기의 핵심원인은 '정당의 비민주성'과 '시민과 분리된 정당'의 문제이다. 정당개혁의 요제(要諦)는 정당의 핵심권력을 더 많은 당원들이 나누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 민주주의'다.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 당원들이 스스로의 힘, 생활정치의 노하우로 정당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정당, 민생정당으로의 전환과 비전 제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선거 때만 당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요한 당 의사결정 과정에 권리당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토폴 뭉쳐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과 당대표, 대통령 후보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권리당원과 도민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말해 달라.

▲ 김상인 바야흐로 국민감성시대가 도래했다. 감성시

대의 기저에는 '생활'이 제일이라는 것이 깔려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도민과 당원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다. 어떻게든 도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당원동지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

▲ 김인아 앞서 감성시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당원과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민생도당, 생활도당이 되어야 한다. 재벌과 기득권층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송승환 도당이 풀어야 할 과제는 도민들과 분리된 정당정치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여부이다. 도민들의 정치혐오증을 극복하고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도당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도당은 도민들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시민참여에 의한 정당운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보면 집단지성의 힘을 도당의 기본 운영원리로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 사회 도당의 선진화는 이제 시작됐다. 도당이 구태(舊態)를 탈피하지 못하고서는 정치는 물론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세 분의 좋은 말씀 진심으로 드린다.

- 사회
· 홍지영 도당 대변인
토론
· 김상인 당보 편집위원
· 김인아 당보 편집위원
· 송승환 당보 편집위원

전남도당이 황주홍 위원장 취임 이후 '투명한 운영'과 '지역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내세우며 조직과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인 정당은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당보다 더 박수받는 도당', '당원 중심의 도당 건설'이란 목표를 설정한 도당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일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된다.

▲ 사회 도당의 현 주소를 먼저 진단해보자. 도당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변해야 도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중앙당의 개혁을 견인하고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원인에서부터 대안까지 폭넓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상인 국민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의 도민과 당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도당의 중심인 당원의 대부분은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인들인 점을 유념하여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제시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송승환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고 농도 전남의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금 정치권은 과거의 엘리트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생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흩어진 당심을 되찾고 다시 수권정당이 되려면 계파싸움을 청산하고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전남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 약진하고 새누리당에게 안방을 내주는 이변이 벌어진데 대해 모두가 뼈를 짚는 반성을 해야 한다.

▲ 김인아 체질 개선에서부터 시스템 정비 등 과감한

국민의 마음 되찾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정당으로 거듭나야

3대째 야당가풍 ... 살아있는 역사이자 소중한 사료박물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야당사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민주주의와 구국 투쟁의 본 고장, 전남.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일궈 낸 전남에서 3대째 대를 이어 구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활동중인 당원이 있다. 그 주인공은 3선 전남도위원을 역임한 김종대 광양·구례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65·전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단장). 할아버지와 부친의 뒤를 이어 광양에서 3대째 야당 생활을 이어 오고 있는 그의 집안은 존재 자체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전남 야당사의 소중한 사료 박물관이다.

선친·조부 정치활동 보며 성장

김 부위원장은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 “유년기 시절부터 선친과 조부의 정치 활동을 보며 자란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듯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들만 셋을 둔 그는 “2세대 중에서도 1명 정도는 정치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집안 분위기 외에 그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따로 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를 돕기 위한 청년 외곽 조직인 ‘연청(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과의 인연 때문이다.

JC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염동연 전 의원(연청 전남회장)의 권유로 연청 초대 광양지회장을 맡아 198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곽 선거운동을 도왔다. 연청은 이후 1998년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젊은 층의 표 집합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해 냈다. 당시 전국적으로 30만명의 회원을 거느렸으며, 지난 2012년 ‘통일시대위원회’로 발전적 해체를 했다.

평민당 공천으로 도의원 '3선'

김 부위원장은 이어 지구당 사무국장 등의 당직을 역임하며 1991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평민당 공천으로 전남도의회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연속 도의원을 지낸 뒤 광양시장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단장과 광양시민포럼 대표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할아버지는 1955년 창당된 구 민주당으로 민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고(故) 김석주 5대 민의원이다. 고인은 1945년 해방 직후 초대 광양군수에 이어 초대 민주

당 광양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민주당 총재는 1957년 2월 민주당 광양지구당 창당을 기념해 내려와 조부 김석주의 집에서 1박을 하며 직접 친필 휘호를 남겼다. ‘민국 38년에 광양 방문’이라고 쓴 신익희 후보의 휘호는 지금도 김 부위원장의 자택 거실에 걸려 있다. (‘민국’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의미)

부친은 DJ 평생 동지이면서 친구

김 부위원장의 부친은 신민당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한 고(故) 김경의 전 민주당 광양지구당 위원장. 부친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이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YS)와 맞붙었을 때 DJ를 지지한 것을 계기로 DJ의 평생 동지이자 친구로서 연을 맺었다. DJ는 원내총무 경선에서 졌으나 결국 197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YS를 이겼다.

당시 DJ는 광양 유당공원 유세차 광양에 내려왔을 때 김 부위원장의 자택을 찾아 참모들과 선거 전략회의를 했다. 구 민주당의 초대 대선 후보였던 신익희도, 민주당을 계승한 신민당의 대선 후보 DJ도 김 부위원장의 집을 방문했다. 대통령 후보들 뿐 아니라 박순천 구 민주당 총재 권한대행, YS, 이희호 여사, 고희문, 홍남순, 정기영 등 옛 야당의 원로들도 광양 자택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의 자택은 선친과 조부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권의 야당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뿌리 깊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인연이다. DJ는 1991년 지방선거 때 그가 도의원에 출마하자 광양에 내려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가족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민심의 신뢰에 당 존재 달려"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지지율 제고방안과 관련, “잃어버린 국민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노력하는 생활밀착형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이 경제 회생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정권을 되찾기 어렵다”고 고언했다. “민심의 신뢰에 당의 존재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정권교체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홍지영 | 편집인



김종대 상임부위원장.

1991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평민당

공천으로 전남도의회에 당선됐다.

내리 3연속 도의원을 지낸 뒤 광양시장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단장과 광양시민

포럼 대표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DJ와 부친 김경의.

● 신규 당원 클로즈 업

가장 안전한 관광지 ‘홍도’ 만들기

신안군 홍도 1구 이장 김근영씨

신규 권리당원 입당... 대잇는 관광사업 ‘몰두’



남해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 홍도(紅島). 해질 무렵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고 하여 홍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홍도는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30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다.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이 섬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있다.

최근 신규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홍도1구의 이장 김근영씨(43)가 그 주인공. 김씨는 1, 2구를 합해 150세대 470여명이 살고 있는 홍도에서 대를 이어 관광업에 종사하는 홍도 토박이다. 그는 “홍도가 가진 관광자산을 잘 활용하

면 거문도, 백도, 제주도과 경쟁하는 관광지로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주민 모두가 관광객 감소로 인한 큰 시련을 겪으면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홍도관광’ 사업개발 등분서주

작년의 시련을 거울삼아 홍도의 관광여건 개선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그는 3개월째 목포로 주 생활터전을 옮겨 뛰고 있다.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 관광 비수기다. 이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홍도 알리기를 위한 팸 투어를 주선하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군청과 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홍도는 지금까지 단 1명의 군의원이나 도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마을의 공동 현안을 위해 이장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천성적으로 책임감과 부지런함을 갖춘 그가 관광 시즌에 대비해 개인 사업장을 돌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홍도의 현안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그는 첫 번째로 “홍도를 안전한 관광지로 육성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관광유람선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중형급의 신규선박으로 바뀌나갈 계획이다. 홍도 주민들은 현재 7척의 관광유람선을 주민 공동투자로 도입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7척 모두 수령 10년을 넘겨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주민공동 유람선사업 확대 박차

김 이장에 따르면 홍도는 연중 바다가 조용한 날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 유람선의 안전 운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김씨는 “현대식 관광편의 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춘 관광유람선 1척을 건조하는데 최소 20억원이 소요돼 주민 역량만으로는 구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남도와 정부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는데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관계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현대화된 유람선 도입 정책자금을 못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도 주민들은 지난해 진도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사고가 수습될 무렵인 9월에는 ‘엷친데 덮친 격’으로 홍도에서도 관광 유람선 좌초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사고 당시 모든 주민들이 신속하게 구조활동에 나서 선원 5명을 포함, 110명 전원을 구조했다.

두 번째 현안은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유람선 사업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는 개인 사업을 더 키울 꿈은 없다. 대신 주민 공동사업인 유람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유치해 회사를 키우고 소득분배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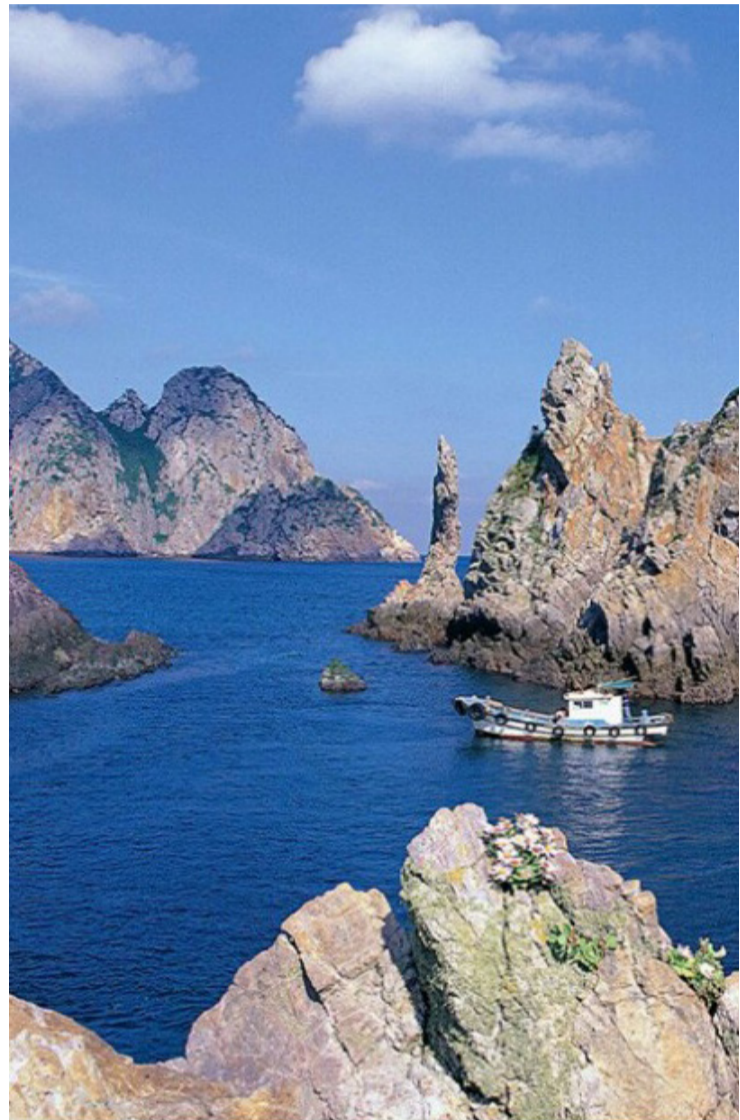
지자체 “섬관광진흥 관심 가져야”

그는 자신이 중고교를 다닌 목포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홍도 주민들의 경우 연간 5천만 원을 벌면 자녀 교육비를 비롯해 거의 전액을 목포에서 소비한다. 신안군의 다른 도서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목포시는 여객선터미널 주차시설과 관광편의시설 개선 투자에 인색하다. “목포시가 섬 관광진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김 이장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

중·고생 딸 2명을 둔 김씨는 2세대 만큼은 고향인 홍도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한 관광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 만큼은 교육과 문화 혜택 등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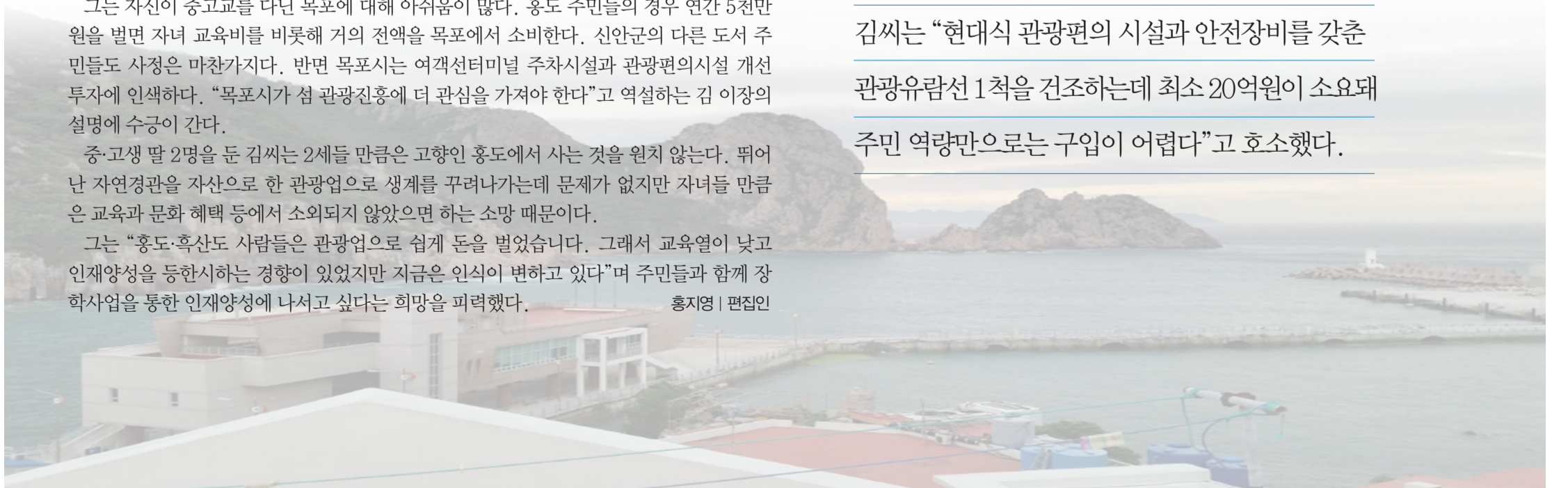
그는 “홍도·흑산도 사람들은 관광업으로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낮고 인재양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에 나서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홍지영 | 편집인



홍도는 연중 바다가 조용한 날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관광 유람선의 안전 운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김씨는 “현대식 관광편의 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춘 관광유람선 1척을 건조하는데 최소 20억원이 소요돼 주민 역량만으로는 구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민주화 고비마다 ‘대이변’ 연출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 바뀌었다

한국 정치사에 한 획 그은 전남 야당 정치비화 발굴 소개할 터



신민당 광양지구당 개편대회를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김종대 부위원장 제공)



신민당 대선 후보시절의 DJ.



신민당 지구당개편대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로 창당 60주년을 맞았다. 한국 야당 역사에 있어서 전남을 비롯한 호남은 ‘어머니’이자 ‘뿌리’와 같은 존재다. 특히 전남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수 많은 애국 지사를 배출했고,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민주주의와 구국의 본고장이다. 본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을 기념해 2015년 연중기획으로 전남 야당의 정치사와 정치 비화를 인물 중심으로 발굴해 소개하는 ‘전남의 야당사’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당명 변화따라 야당의 역사도 변신 거듭

새정치민주연합은 1955년 창당된 구 민주당의 적통(嫡統)을 계승한 정통 야당이다.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정치 지형과 환경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당의 명칭도 개명과 변신을 거듭해오다 오늘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태인 구 민주당은 1955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반발로 조병옥, 장면, 신익희 등의 주도로 출범했다. 이후 민주국민당(민국당), 민주당, 민중당, 신민당, 평화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으로 야당의 역사는 변화와 반복을 거듭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민주당의 창당 59주년인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 체제 하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선언하면서 탄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와 영남 세력 절대 우위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무너뜨리고 잇따라 두 번이나 집권에 성공했다. 특히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민주개혁 세력을 이끌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기까지는 구 민주당 창당 이후 무려 4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분단이 고착화된 한반도 정치상황에서 요지부동의 보수 기득권 세력을 꺾고 집권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민주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어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광주와 호남의 반란’으로 표현되는 군소 후보로 간주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또다시 성공했다.

야당사는 이처럼 때때로 ‘대이변’을 연출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그 이변의 뒤에는 항상 전남과 호남이 있었다. 때론 정권의 핵심부에서, 때론 음습한 정보기관의 대공분실에 끌려가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던 전남의 야당 정치인들. 그들의 삶과 정치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정치 비화들을 발굴하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다.

감시와 미행이 일상화된 암울했던 시절 70년대

‘40대 기수론’의 깃발이 펄럭이던 신민당의 1970년 임시 전당대회장 한 칸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양-구례지역위원회 김종대 상임부위원장(전 전남드래곤즈 축구단 단장)의 부친 고 김경의씨(구 민주당 광양지구당위원장)였다. 부친 김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의 인연은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에서부터 시작했다. 거제도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당시 28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후보(YS)와 전남의 작은 섬 하의도 출신으로 어렵게 정계에 진출한 DJ가 격돌했다. 그가 지명도가 낮았던 DJ를 지지하면서 한 살 차이의 두 사람은 친구이자 동지가 돼 의기투합했지만 YS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하지만 DJ는 김영삼과 이철승이 가세한 1970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원내총무 경선 패배를 되갚고 일약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극했다. 이 때부터 그의 가족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됐다. 부친 김씨는 특히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라는 이유로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군사 정권 시절 DJ를 돕는 자체가 죄가 됐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의 감시와 미행이 일상화된 암울한 시절을 가족들도 견뎌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경찰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주부가 시장에 갈 때도 미행을 당했는데 남편은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어머니 천영심 여사(86)의 증언이다. 부친 김씨는 탄압을 뚫고 1972년 총선에 나섰으나 공화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1972년 DJ는 처음으로 광양을 찾아 유당공원에서 대선 후보 연설에 나섰다.

동지였던 김씨의 자택을 찾은 DJ는 고흥문 전 의원과 홍남순 변호사, 정기영 전 의원(순천지구당 위원장), 김대희 씨 등을 불러 촛불을 켜 놓고 대선 일정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그의 자택은 YS, 박순천, 박병호 등 당시 신민당 정치인들의 전남 동부지역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DJ중심 ‘동교동계’는 전남 야당사의 뿌리

1980년대 이후로는 전남의 정치사와 야당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치세력은 ‘동교동계’다. 이른바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DJ를 중심으로 한 정치계보는 전남 야당사의 ‘뿌리’이자 ‘축’이다.

권노갑, 김옥두, 한화갑 전 의원 등 1세대 멤버들이라면 국창근, 김경재, 윤철상, 배기선, 정동채 전 의원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전갑길, 배기운 전 의원 등은 2~3세대다. 또 한광옥, 조재환, 박양수, 이훈평 전 의원 등은 범동교동계로 분류된다.

동교동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 계보인 상도동계와 함께 제2공화국 이승만 정권부터 현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까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와 사회 각 분야를 쥐락펴락 하며 경쟁을 펼쳐왔다. 특히 동교동계는 서슬퍼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문과 감금, 미행, 폭행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다.

동교동계를 계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로선 다가오는 2017년 대선에서도 새누리당과 양강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권 야당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남에는 35만1천여 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있다. 그 중에는 김 부위원장의 가족사처럼 2대, 3대에 걸쳐 구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야당의 숨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남 야당사의 뿌리인 풀뿌리 기간당원들의 제보와 자료 제공을 바란다.

홍지영 | 편집인

DJ중심 동교동계는 YS 계보인 상도동계와 함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경쟁을 펼쳐왔다. 특히 동교동계는 서슬퍼런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문과 감금, 미행, 폭행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소식의 기사 순서는 선거법상 법정 선거구 순으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지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통해 '전략공천 필요성' 제기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자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문제인 대표가 욕 안 먹으려고 ‘무난한’ 방법을 택한다면 ‘무난하게’ 패배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경선 패배후 처음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4·29 보선 전략을 문제 삼으며 “전략공천의 잡음을 두려워해 ‘이기는 선거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경선이 좋은 것도, 전략공천이 나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길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한다.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앞으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법안 대표발의



주승용 의원(최고위원·여수)은 2월 24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등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0.8%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 또는 사

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 등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 교통사고에는 무관심하다”며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 경제난 타개책으로 임금인상 제안



우윤근 의원(원내대표, 광양·구례)은 3월 3일 “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경제가 위기로 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하면서 경제난 타개책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근로자 실질 임금 상승률은 1.3%였고 새로 생긴 일자리의 87%가 질(質) 낮은 일자리였

다”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높이고 기업은 현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우리 당은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분배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법안 대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4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피해대책이 이

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직불금 혜택을 주기 위해 피해보전 직불금 시행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해당 품목의 평균가가 기준가보다 하락한 경우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직불금 지급금액은 현행 90% 보전에서 100% 상향하는 안도 담았다.

김영록 의원, 최저소득 근로자 공제율 80% 환원 추진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2월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해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70%를 80%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천만원~4천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진된 총 급여 3000만원~4500만원 사이의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해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축소 누진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0만원~150만원 가량 공제 축소가 되면서 증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 '한국전쟁 민간희생 명예회복' 법안 대표발의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2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구 의원 15명이 공동 참여했다. 제정안에는 2년간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진실규명 기간을 마지막 진상조사 개시 결정 후 3년간으로 규정했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전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 위령사업과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한국전쟁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2013년 3월)안과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2014년 8월) 일부개정안에 이어 이번 법안이 과거사 관련 법률로는 세 번째 대표발의”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3월 6, 7일 양일간 나주지역을 순회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동영상 통해 주민들에게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벼이삭도 열병을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하고, 배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

가 피해대책 마련 등 지역과 농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고했다. 신 의원은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나주발전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 "정부, 미국 웬디셔먼 차관 발언에 분명히 대응" 촉구



이개호 의원(함평·영광·장성·담양)은 3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웬디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온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미국 정부가 과거역사에 대해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1차적인 확인만 했다. 그러면서 미국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여론을 듣고 미적거리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 아파트 양도세 탈루 의혹'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부산의 90평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의원(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9월 부산 남구의 아파트(303.13㎡)를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당시 기준시

가의 적용을 받아 3억93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소득세법은 시세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의 예외로 두고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6~7억으로, 23층인 고층은 인기가 많아 상위 평균 7억원을 상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이 사실인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 무안·신안 23개 읍면 지역 순회 의정보고회 열어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3월 5일부터 23개 읍·면 모든 지역 순회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5일부터 신안군 임자면을 시작으로 25일 무안군 해제면까지 순회하는 21일간 대장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무안군 개발촉진지구 진행 상황과 신안군 연도교 및 연륙교 건설 현황을 포함한 지역구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농산물 주산지 보

호법을 비롯한 법안 추진 현황과 지역 민원 사항 조치결과도 보고한다. 보고회 기간 대부분 숙박을 현지 민박이나 마을회관 등 현장에서 해결하며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4일 “군민을 위해 중앙부처를 뛰어 열심히 일한 내용과 주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의정보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바로잡습니다 - 전남도당 2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이월금 등 15억1409만원

지출, 조직활동비 등 2억8851만원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찾기’와 ‘투명한 도당 운영’을 위해 매달 발간되는 당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당 재정지출 내역’을 통해 낱알이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당보(16일 발간)에는 1월 한 달간의 수입·지출 총괄표만을 게재하고 지면사정으로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당보를 통해 황주홍 신임 위원장이 당선된 1월18일 이후의 상세한 당비 지출내역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황주홍 도당 위원장이 취임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3614만원과 권리당원 당비를 포함, 총 15억 140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당은 이 가운데 당직자 인건비(퇴직 급여 포함) 1억1248만원과 사무소 임대료와 운영비 2천5066천원의 기본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 조직활동비 1억5047만원과 그 밖의 경비 등 총 2억8851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호부터 당보를 통해 보고 드리는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도당 사무처 장미랑 총무간사(T.061-287-12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 더욱 투명하고 알찬 도당 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5.01.19~02.28)

Table showing summary of revenue and expenses. It is divided into '수입' (Revenue) and '지출' (Expenses). Revenue includes year-end carryover, membership fees, and party dues. Expenses include election costs, basic operating costs, and organizational activity costs.

● 당비 지출내역

Detailed table of party dues expenses. Columns include Item Name, Date, Category, Name, Position, and Amount. Items include rental fees for meeting rooms, training fees, and other organizational costs.

Main table of party dues expenses. Columns include Date, Description, Item Name, Category, and Amount. This table provides a line-item breakdown of all expenses listed in the summary table above.

Table with 6 columns: Item, Date, Description, Unit, Amount, and Value. Rows include various expenses such as meals, transportation, and administrative costs.

Table with 6 columns: Item, Date, Description, Unit, Amount, and Value. Rows include various expenses such as meals, transportation, and administrative costs, continuing from the first table.

